

홍콩의 中國歸屬과 台灣의 對應

1. 序
2. 台灣企業의 홍콩 脫出
3. 「1國 2體制」와 台灣統一
4. 台灣의 對應
5. 結語



崔秀雄
亞州經濟室 研究委員

1. 序

홍콩은 150년에 걸친 영국 식민지역사를 마감하고 마침내 중국에 귀속되었다. 홍콩은 앞으로 50년간 한 국가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른바 「1국 2체제」에 의해 통치된다. 홍콩 귀속에 의해 중국은 「1국 2체제」의 중간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1국 2체제」의 최종목표는 말할것도없이 台灣 통일이다.

대만국민들은 홍콩의 중국귀속이 임박한 지난 6월 台北과 高雄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① 대만은 주권국가이다. ②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③ 중국에 의한 대만통일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李登輝 총통도 대만과 홍콩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1국 2체제」에 의한 대만통일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본고에서는 홍콩귀속후 본격화될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공세와 대만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최근 中台관계의 긴박한 변화 상황을 살펴본다.

2. 台灣企業의 홍콩 脫出

홍콩의 중국 귀속으로 홍콩을 對中交流의 거점으로 이용해온 대만정부와 기업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중국정부의 「1국 2체제」(一國兩制) 공세는 접어두고라도 대만정부가 당장 대응해야 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세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홍콩내 대만 관방기구들의 운명이다. 홍콩의 귀속으로 '駐홍콩 대만영사관'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中華旅行社 등 9개기구의 장래가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대만은 지난 7월 행정원 대륙위원회 산하에 홍콩사무국을 설치, 금후 이들 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도 대만기관의 존속을 非政治的 활동에 限한다는 조건부로容忍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치적 활동을 해온 이들 관방기구에 非정치적 활동만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이들 기구의 존립기반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데 있다.

홍콩에 진출해 있는 대만의 19개 금융기관, 3천개 회사들의 앞날도 문제다. 사실 그동안 홍콩은 대만기업들에게 대륙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70년대말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행한 이후 대만기업들의 對中무역의 상당부분은 홍콩을 경유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1988년 이후 중국의 개방정책 확대와 대만의 對中 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양안간의 무역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대만의 對홍콩교역도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다. 대만은 1996년 홍콩에 159억 3,0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였는데, 그 상당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었다.¹⁾ 반면 대만이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43억 1,000만 달러에 그쳐 대만은 對홍콩무역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0억 달러 이상의 出超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년들어 홍콩내 대만기업들은 홍콩반환뒤 중국으로부터 가해질 정치적 압력을 우려하여 회사를 싱가포르로 옮기는 등 장래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가구업체인 優美가구와 선물업체인 上威선물공사 등 홍콩내 유수한 대만거상들이 속속 싱가포르로 떠났고 홍콩내 국민당 자산도 沒收될 것에 대비해 이미 싱가포르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내 대만기업들의 80%가 홍콩 밖으로 등록지를 옮겼다는 비공식 통계도 전해지고 있다.

또 하나의 민감한 문제는 대만 수교국가들의 홍콩영사관 운명이다. 중국정부가 “대만수교국가들의 홍콩영사관은 폐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 4년간 온두라스·잠비아·니카라과·기니비사우·코스타리카·도미니카 공화국 등 6개국 총영사관이 문을 닫았고 현재 남은 파나마 등 8개국의 총영사관의 장래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중국정부는 홍콩반환 이후에도 홍콩을 근거지로 한 대만기업의 경제활동은 「1국2체제」의 원칙에 따라 법적인 권익이 보장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²⁾ 「1국 2체제」의 정치적 의미가 경제활동의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대만기업들의 홍콩탈출 내지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 1996년 대만의 對中 수출중 67%가 홍콩을 경유하여 수출되었다.

2) 1995년 6월 전기침 외교부장관은 홍콩반환 후의 홍콩과 대만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홍콩과 대만간 민간차원의 경제·문화 교류나 인적왕래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대만자본의 홍콩내 경제활동을 환영한다. ②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홍콩과 대만간의 교통은 지역간의 특수항로로 취급한다. ③ 홍콩과 대만간의 각종 명의로 행하는 공적기관의 접촉은 중국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④ 대만의 모든 기구는 <홍콩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안되고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원래 등록 시 신고된 업무의 성격과 다른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표 1〉 대만의 홍콩 官方機構

기구	파견 또는 감독기관	기구	파견 또는 감독기관
중화여행사	대만외교부	화광여행사	대만교무위원회
遠東무역센터	대만경제부	해외화교청년센터	〃
台北무역센터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	연합교학센터	대만교육부
光華신문문화센터	대만신문국	교육부 홍콩대표	〃
화교여행사	대만교무위원회		

3. 「1國 2體制」와 台灣 통일

1997년 이후의 홍콩 통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이고 일관된 원칙은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1국가 2체제’의 인정, 홍콩의 안정과 번영지속」(港人治港, 一國兩制, 保持繁榮穩定)으로 요약된다. 이 원칙은 1990년 4월 4일 全人大 제3차회의를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다.

즉 홍콩은 97년 7월 1일 이후에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행정, 사법, 통화 및 경제에 관한 한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라는 한 국가안에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가 공존하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중국정부가 1984년 영국과 홍콩반환 협상을 전개한 이후 줄곧 강조했던 핵심적 내용이다. 중국정부는 최근에 와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외교분야에 대해서도 IMF, IBRD 등 홍콩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홍콩·중국」(Hong Kong·China)의 이름으로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국 2체제」의 운영에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국 2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국가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역사적인 실험을 통해 중국을 통일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홍콩 통치수단으로 「1국 2체제」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중국통일의 과업을 전면에 부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국 2체제」의 다음 목표는 台灣이라는 점에서 「1국 2체제」는 대만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장기전략에 다름아니다.

1997년 7월 1일자 『人民日報』는 「중화민족 1백년의 성대한 이벤트」란 제목의 사설에서 모택동 주석, 주은래 수상 등 신중국의 지도자들이 ‘홍콩귀속의 기초를 다졌다’고 강조, 「1국 2체제」의 구상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문제를 해결하여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설은 「1국 2체제」가 없었다면 홍콩의 귀속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상 「1국 2체제」는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겨냥한 등소평의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홍콩의 「1국 2체제」는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험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중국은 그간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면밀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중국과 대만은 표면상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대화의 통로를 유

지하고 있다. 95년말에 개항된 마카오 국제공항을 경유할 경우 동일 비행기로 북경-대북을 왕래할 수 있고 홍콩뿐 아니라 마카오에서도 中台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현안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³⁾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1일 홍콩에서의 오전행사를 마치고 北京으로 귀임한 즉시 연설을 통해 대만측에 평화통일의 실현을 호소한 것은 바로 이같이 中台간에 內密하게 진행되어온 통일협상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江주석은 연설에서 「1국 2체제」의 구상을 제기한 등소평에 언급, ‘홍콩문제의 해결과 조국통일을 향한 不朽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대만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중화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지적한 후 “대만당국은 민족의 大義에 입각하여 하나의 중국, 조국의 완전통일을 이룩하는 데 성실하게 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첫단계로 「三通」(通航, 通商, 通信)의 조속한 실현을 대만측에 촉구했다.⁴⁾

한편 정부를 대표하여 연설한 李鵬 수상은 “홍콩의 귀속은 새로운 홍콩의 시작임과 동시에 조국통일의 대사업, 세계의 진보와 정의를 갈망하는 세력의 중대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그는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수세대가 소요될 중국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李鵬의 연설에서도 홍콩의 귀속이 하나의 중국을 향한 중요한 진전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정책은 정치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화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대만 경제의 중국의존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홍콩귀속은 중국의 이러한 대만정책에 또 하나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홍콩귀속으로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8개국의 총영사관이 폐쇄될 운명에 놓여짐으로써 가뜩이나 국제무대에서 중국에 밀려온 대만으로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實利外交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⁵⁾

홍콩귀속에 따라 대만경제에 가해질 압력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만 5,000여개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연간 홍콩과의 무역에서 10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으로서는 장차 대만기업들에 가해질 압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만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만기업들이 받게 될 「1국 2체제」의 압력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제논리에 의한 「1국 2체제」가 조금씩 먹혀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만정책은 금년 가을에 개최되는 제15차 黨대회가 또하나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江澤民 주석은 홍콩귀속의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을 확립하게 되면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⁶⁾

3) 『日本經濟新聞』, 1997. 7. 1.

4) 『朝日新聞』, 1997. 7. 2.

5) 중국의 對대만정책, 中台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해서는 アジア경제연구소의 『香港返還と中國, 台灣』(1997.1)을 참고

6) 그러나 대만의 국민대회가 7월 18일 台灣省을 사실상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의 對대만정책은 다시

그러나 중국의 대만정책이 유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측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1국 2체제」의 대담한 發想은 원래부터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想定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의 통일공작은 이미 홍콩·마카오의 식민지 回收로부터 대만으로 목표를 옮기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4. 台灣의 對應

홍콩의 중국귀속을 보는 세계의 視角은 대체로 낙관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홍콩의 장래에 대한 낙관은 주로 ‘2체제’의 公約을 중국이 준수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만측도 홍콩에 관해서는 「고도의 自治」,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라는 약속이 지켜져 번영이 유지된다는 데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또 淸朝에 의해 할양된 홍콩이 식민지 통치를 마감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만이 「1국 2체제」하에서 통일공작의 목표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對中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1997년 홍콩정세에 관한 입장과 정책』이라는 장문의 성명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

성명은 우선 「1국 2체제」의 초점이 ‘2체제’가 아니라 ‘1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국가통일에 있다는 분명하게 지적한다. 중국과 대등한 政治實體임을 표방하고 있는 대만으로서 중양(중국정부)과 지방(대만당국)이라는 구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고통치권자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등 민주정치체제하의 대만을 식민지와 同列로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만측의 논리이다. 따라서 江澤民 주석의 「1국 2체제」에 의한 통일제외에 대만이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李登輝 총통은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은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홍콩과는 다르다. 대만은 實效支配 地域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대만사람들은 北京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중국측 제의를 명확히 거부했다.⁸⁾

李총통의 지적처럼 홍콩의 귀속과 대만 통일은 분명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보면 홍콩귀속은 150년에 걸친 영국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굴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대만의 통일은 半世紀에 걸친 國共內戰의 최종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상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지금까지 홍콩을 지켜온 것은 영국의 제한된 군사력이었지만 대만의 배후에는 세계최대의 경제력과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⁹⁾

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 『産業經濟新聞』, 1997. 6. 30.

8) 『日本經濟新聞』, 1997. 7. 4.

9) 『産業經濟新聞』, 1997. 7. 3.

江주석이 홍콩과 동일한 방식에 의한 대만통일을 언급한 데 대해 李총통은 “국가통일은 형식보다는 本質이 중요하다. 통일은 민주주의, 자유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안 쌍방은 다같이 정치실체이므로 一方이 他方에 종속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대만을 중국과 대등한 정치주체로 格上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작년 총통 취임식에서 자신의 대륙방문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부터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武力행사의 포기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국측의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李총통이 중국의 「1국 2체제」에 의한 통일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이어 대만의 國民大會는 지난 7월 18일 「台灣省」의 실질적인 폐지와 총통에 의한 行政院長의 직접임명 등 총통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11개항의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개헌안에 의해 대만은 중국과 대등한 정치 주체로서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히 함으로써 「2개의 중국, 1中 1台, 2개의 정치실체」에 반대해온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대만의 개헌안에서는 「省級조직의 동결」이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자치선거에 의해 省長과 省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독립된 지방자치체로서 기능해온 「省」을 중앙의 관할하에 두어 명목상의 조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일부인 台灣省의 실질적인 폐지를 의미한다.

대만성의 폐지는 「1국 2체제」에 의한 대만통일을 추구하는 중국에 있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가 붕괴되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중국측으로서는 도저히 容認할 수 없는 것이다.

홍콩의 장래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만경제에 있어 홍콩이 지닌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과의 정치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경제면의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李총통은 홍콩의 장래문제와 관련하여 “대만은 홍콩과의 관계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홍콩이 금융, 통상, 물류센터로서 계속 번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李총통의 이같은 발언은 홍콩이 중국과의 경제교류거점으로서 귀속후의 위상변화에 따라서는 대만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만정부가 홍콩에 주재하는 대만측 기구를 전부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 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원 대륙위원회 산하에 새로 홍콩사무국을 설치한 것은 이같은 홍콩의 경제적 중요성을 重視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홍콩사무국의 설치에 對홍콩업무의 一元化라는 측면과 함께 홍콩귀속후 강화될 중국의 經濟攻勢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홍콩 귀속후 중국이 경제를 통해 최종목표인 대만통일 공작을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우선 7월 1일부터 대만기업의 중국내 持株會社 설립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對中 투자진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만기업의 홍콩투자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중국의 대만기업 인수기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데 그 목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심사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내 인프라 투자는 계속 전면금지 되고 기업설립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또한 대만기업의 對中투자 창구인 홍콩에 대한 투자는 5,0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종전 처럼 事後申告만으로 가능하나 홍콩에 정치, 경제적 변동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5. 결어

중국정부는 150여년에 걸친 영국의 홍콩식민지배를 종식시키고 마침내 지난 7월 1일을 기해 홍콩의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제 중국은 1999년 포르투갈領 마카오를 회수하면 곧바로 대만을 향해 「1국 2체제」에 의한 통일공세를 본격화하게 된다. 이러한 통일일정이 중국 측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일 홍콩에서의 「1국 2체제」 실험이 성공하여 홍콩이 명실상부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중국의 통일대업은 의외로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홍콩문제는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변수들로 얽혀 있다. 대만 국민대회의 헌법개정안 채택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중국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정부는 대만성의 폐지방침과 총통 권한의 강화를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행위'로 비판하고 대만과의 민간교류를 제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중·대만 민간레벨의 회담재개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또하나 중국이 홍콩문제로 인해 對外的으로 마찰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미국은 1992년에 제정한 <홍콩 關係法>에서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도록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견제는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추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동아시아를 그들의 세력권 안에 두려할 경우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경쟁은 곧바로 대만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對美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가급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홍콩은 바로 그러한 對美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